

↑ 코스피 2572.09 (+58.72)	↑ 코스닥 731.03 (+21.61)
↑ 금리 (미국 9년) 2.866 (+0.046)	↑ 환율 (원-달러) 1341.80 (+2.80)

m-커버스토리

티메프·전세사기·금투세 등 민생현안 도마위 오른다

22대 국회 첫 국감 이슈

티메프 사태 집중조명 전망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주목
금투세 폐지 등 첨예대립 예고

22대 국회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는 윤 대통령 집권 초반이

로, 정부 정책 집행 상황에서 상당부분 이전 정부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과 과를 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정쟁보다는 먹거리가 궁금하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회복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여야 경제상임위가 어떤 현안을 집중 추궁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여름 휴가철을 뜨겁게 달궜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힌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를 두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째 피해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는 올해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에 허점

이 있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제시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지역형 급발진 사고' 등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지적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만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만든 저출생 대책도 국감에 언급될 전

망이다. 신혼부부를 울리는 '부동산'이 문제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여야가 폐지 혹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지만, 상속세와 종부세는 총론과 각론이 모두 갈린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칩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72포인트(2.34%) 오른 2572.09에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61포인트(3.05%) 상승한 731.03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우리금융 사고, 심각한 우려 경영진 거취는 이사회가 판단”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당분간 부채관리 엄정하게 관리”

“우리금융그룹에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다. 금감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경영진도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와 함께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단순히 직원의 판단 부재로 보기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만큼 현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리금융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책임을 묻는 주체는 이사회와 주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우리금융 이사회가 현 경영진의 진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한 이후 절반

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9월 5영업일 밖에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달 들어 은행권에서 5영업일 간 발생한 가계대출은 1조 1000억원으로 8월 5영업일 기준으로는 절반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과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당분간 부채관리를 엄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만큼 수요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채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해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직접 보조금으로 K반도체 경쟁력 높여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글로벌 기업 경쟁 위해 지원 필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조선·서울 강남병·사진)은 12일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복지재원으로 환원돼, 결국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늦게 시작할수록 타 국가와의 경



경쟁력 우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주요 경쟁국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설명했다. **<관련 인터뷰 3면>**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산업”이라며 “현재 직접 보조금의 당위성을 근거로 서로 한창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에 수십조원의 직접 보조금

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지원’을 넘어서 직접 보조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야 반도체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팹(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이어지고 이는 법인세, 소득세 납부 등으로 ‘성장을 통한 기여’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여야의정, 참여 의향 밝힌 단체부터라도 일단 시작하자” /사진 뉴시스
▲ 대통령실 “감사원 감사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 확인돼”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공사 법규 위반 여려진”... 경호처 간부 ‘파면’ 요구
▲ 민주당 “정부·여당, 25년도 의대정원 입장 정리해야... 협의체 빨리 출범하자”



▲ 부산 간 조국 “민주당, 보선 후보 공개 토론 통해 단일화하자”
▲ 오세훈 “이재명, 25만원 살포를 소비쿠폰이라고 말장난” /사진 뉴시스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9월16일~18일자 신문 쉽니다.
(인터넷뉴스는 정상 서비스)